

민주당에 빼긴 하원

# 美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협상 속도·검증이 관건

예산 심의·법률 심사권 등 제동?

민주당, 북한 비핵화 불신 강해

“연내 종전선언은 어려울 듯”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끝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속도를 늦출 전망이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내걸었다. 당시 정한 범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한꺼번에 점검·사찰·폐기하는 대신, 협상 진도에 따라 하나씩 완전 폐기하는 ‘도미노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마이크 품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뉴욕 고위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미국은 회담이 연기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하며 북한이 조기 제재완화 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수를 늘리고 하원에서의 의석수 상실은 최소화해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는 역사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뉴스

치를 얻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CNN은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사찰 허용 같은 조치를 얻으려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 북미 간 의견차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읽힌다.

여기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권을 휘둘러 트럼프 임기 후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 역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 내용이 민주당 주도로 검증되거나 선택지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예

상된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백연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민주당은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해, 그동안 트럼프의 북핵 협상에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어느정도 예견된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이 예산 심의권한을 가진만큼, 협상 속도와 검증 문제가 좀 더 까다로워지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백 연구원은 “백악관 참모진의 대대적인 물갈이로 한반도 정책 변화 등 더 많은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며 “미국이 협상 유지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평양회담 당시 기대를 모았던 연내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품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고위급 회담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범률 기자 joker@metroseoul.co.kr

금가는 주요 행사가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은 시기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백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이 조기에 다시 일정을 잡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시한 사찰 및 검증, 북한이 강조하는 제제완화 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연내 종전선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은 북미 대화 이후 결정될 전망이어서 대북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애가 타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며 “정확한 시점은 말하기 어렵지만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사전에 통보받았다. 한미 간 여러 소통 채널을 통해 사전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범률 기자 joker@metroseoul.co.kr



미연방하원 동시 입성하는 한국계 미국인 영김·앤디김

## 한국계 앤디김·영김 당선 사상 첫 美하원 동반 입성

미국 중간선거에서 2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하원에 동시 입성하게 됐다. 뉴저지 3선거구에 출마한 앤디 김과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 출마한 영 김이 주인공이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앤디 김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출마한 뉴저지 3선거구에서 하원의원 선거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가 상당히 앞섰다. 승리를 선언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실시간 개표상황에 따르면 앤디 김은 자신이 출마한 뉴저지 3선거구에서 99% 개표 기준 49.8%를 득표했다. 경쟁자인 공화당 톰 맥아더는 48.9%를 득표한 상황이다. 경쟁자인 공화당 소속의 톰 맥아더 측은 아직 폐리를 공식 인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앤디 김은 개표 초반만 해도 맥아더에게 약 6대3 상황으로 밀리며 약세를 보였지만 꾸준히 격차를 좁혀왔다. 이날 새벽까지는 맥아더가 앤디 김을 0.9% 차이로 앞섰지만 앤디 김 지지세가 강한 벌링턴 카운티 개표가 진행되며 상황이 뒤바뀌었다.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공화당 소속 영 김도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100% 개

표 기준 51.3%를 득표, 48.7%를 얻은 민주당 경쟁자 길 스네로스를 누르고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들 두 사람의 선거 승리로 미 연방의회에는 1998년 김정준 전 의원이 물려난 이후 20년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입성하게 됐다.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연방의회에 동시에 입성하는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앤디 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동전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친(親)오바마’ 인사다. 한국에서 뉴저지로 이주한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이기도 하다. 소아마비를 겪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지지해왔다.

영 김은 지난 1975년 한국에서 이주한 이민자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로스 앤젤레스 소재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1990년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이 지역에서 13선을 지낸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과 20여년간 함께 일하다 이번에 선거구를 물려 받았다.

한편 공화당 후보로 펜실베이니아 5선거구에 출마한 펠 김과 베지니아 8선거구에 출마한 토마스 오는 각각 선거구에서 35.0%와 23.7% 득표에 그쳐 연방하원 입성에 실패했다.

/뉴스

## 文 “남·북·러 협력기반 확고히 다질 것”

### 한러지방협력포럼

#### 한반도 평화 통해 동북아 번영·평화 가스·철도 등 ‘9개 다리’ 견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과 올해 6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만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양국의 지자체와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키로 뜻을 모은 이후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극동개발의 최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협력이 극동지역을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아했다”면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면적 교류 협력의 길을 걸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바 있다. 2020년이면 수교는 30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는 5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역액도 2016년 보다 41% 증가한 190억불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교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역으로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했고, 지리적으로 가까



전국투어 두 번째 일정으로 경북 포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경북 포스텍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에서 고인수 포항가속기 연구소장의 안내를 받으며 가속기 터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우며, 정서적으로도 통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곳도 극동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극동의 경우 현재 우리기업 39개사가 진출해 농업, 수산업, 주택, 교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국 간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인 71억 달러가 극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추진 중인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항로 등 ‘9개의 다리 협력’도 중앙 정부의 협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양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협력할 때 ‘9개의 다리’ 하나하나는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상북도와 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

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동해선 철도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활동해권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포럼의 의미 등을 담은 ‘포항선언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문에는 ▲러시아 연방 극동지역과 한국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에서 협력 증진 ▲한·러 지방협력 포럼 관련 업무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한·러 지방협력 포럼 구성 확대 ▲포럼은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내후년은 울산에서 각각 열린다.

/김승호 기자 bada@